

## 존엄 또는 규제

스페인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영화 '내 어머니의 모든 것' (Todo sobre mi madre, 1999)에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마르셀라가 등장한다. 마르셀라가 애지중지하던 외아들은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가 된다. 평소 뇌사자 보호자 상담을 업무로 하던 마르셀라에게도 정해진 뇌사자 장기기증 절차가 진행된다. 마르셀라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라는 지위를 이용해 장기를 기증 받은 이의 신원을 알아내고 수혜자가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가 그가 퇴원하는 모습을 멀리서 숨어 바라본다.

스페인은 세계적으로 뇌사자 장기기증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힌다. 100만명당 35명 정도로 100만명당 3명 수준인 우리나라의 열 배가 넘는다. 어느 나라나 장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스페인은 자체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한다. 이는 스페인이 뇌사자가 발생한 즉시 다양한 전문가들이 가동돼 기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순서대로 장기가 배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공평하게 이식



글·하 체 림  
연합뉴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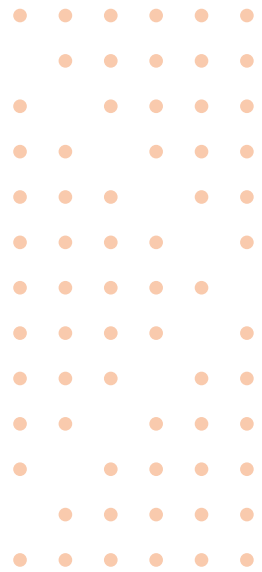
수술을 받을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므로 기증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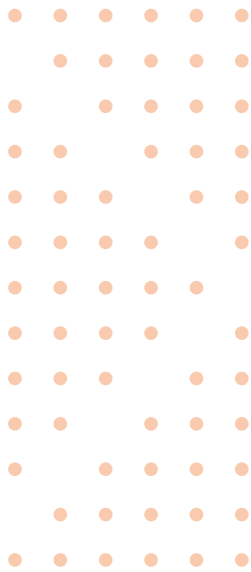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공평한 장기 분배 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뇌사자 보호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기증을 독려하는 일을 할 주체가 없었다. 병원들은 뇌사 환자가 생겨도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증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게 됐다고들 한다. 그래서 신장 1개는 뇌사자 기증 동의를 받은 병원에서 수술 우선권을 주었지만 여전히 기증자는 부족하고 7월 말 현재 간, 신장 같은 고품장기 이식 대기자는 8천956명이나 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장기 배분과 관련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뇌사자 기증 동의를 받은 병원에 신장 1개를 뺀 나머지 장기 전체의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복지부 공무원은 “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배분 규제를 없애 기증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그러나 입법예고대로 하위법령이 확정된다면 뇌사자 장기 기증과 대기자 등록은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두 곳에 집중될 것이라고 염려한다. 환자의 위급도가 아니라 줄을 얼마나 잘 서느냐에 따라 수술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식수술에도 ‘눈치작전’이 필요한 시대가 오는 것이다.

불편한 점은 또 있다. 순수한 의도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내놓은 기증자의 인도주의적 정신이 초대형 병원의 상업적인 의도에 이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민간이 의료를 주도하는 미국에서조차 이런 ‘인센티브’나 ‘규제개혁’은 없다. 기증자를 발굴한 지역내 병원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정도다. 우리나라에 뇌사자 아들을 둔 어머니 마리엘라가 있다면 장기기증 수혜자를 보기 위해 애써 먼 병원으로 찾아가 숨어서 지켜볼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다. 아니, 목숨 같은 외아들이 병원 돈벌이에 이용되는 것이 싫어 기증조차 안할지 모른다.





자신의 몸을 내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은 참으로 숭고한 일이다. 또 모든 생명은 존엄하기에 살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누군가의 눈에 존엄성과 숭고함을 지키기 위한 절차와 조건이 정부의 눈에는 '불필요한 규제'로 보이는 모양이다. 반면 스페인은 꼼꼼하게 설계한 규제로 세계에서 가장 기증이 활발한 사회가 됐다.

올해 7월말 현재 장기기증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한 뇌사자수는 150명. 지난해 전체 장기기증 뇌사자 148명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8월말이면 지난해 1999년의 162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회는 참으로 빠르게 변화를 이뤄내는 곳이다. 권투선수 최요삼씨 이래 뇌사자가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문화도 자리잡을 조짐이 보인다. 제2, 제3의 최요삼 선수가 나온다면 변화는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뇌사자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며 기증 결심을 돕는 전문 코디네이터들이 일하는 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도 지난 4월 시작됐다.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의 노력을 부정하고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강행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또 한 번 떨어뜨리는 일이지 싶다. 우리가 갈 길은 숭고한 정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도, 코너에 몰린 환자들을 '눈치작전'으로 몰아넣는 것도 아닐 것이다. 복지부가 할 일은 장기배분 '규제개혁' 보다는 내가 기증하면 내 자녀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심어주는 일이다. **KHA**